

탄핵 인용 땀 민주 경선 27일 광주서 시작

22일 전국 투표·27일 대의원 순회투표서 호남 승자 발표 결선거면 4월8일...“호남 잡아야 대세” 文·安·李 총력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오는 27일 광주에서 치러지는 호남지역 대의원 순회투표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의 대세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의 10일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론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선 시간표가 운곽이 드러난다.

일단 대선은 5월9일에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대선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일정을 잡아놓은 민주당 경선은 3월 중·하순께부터 불이 붙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후 6시 1차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했다. 탄핵심판 3일 전에 이를 마치려고 했으나 탄핵심판 이를 전에 최종 선고기일이 확정돼 애초 계획보다 1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 이를 길어졌다.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본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으면 대선 50일 전인 20일에 본경선 주자들이 확정된다.

3월 22일에는 전국 250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전국동시투표가 치러진다.

D-45인 3월25일부터 이틀간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충청(27~28일), 영남(29~30일), 수도권·강원제주(31일~4월1일) 지역의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ARS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하이라이트는 3월27일에 광주에서 열리는 호남지역 대의원 순회투표다. 후보들의 연설을 듣고 나면 3월 25~26일 ARS 투표 결과와 현장에서 한 순회투표 결과를 추가해 호남지역의 승자가 발표된다.

야권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이곳의 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세론’이 굳어질 수도. ‘대역전 드라마’의 서막이 열릴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광주 경선에서 대세론의 인연제 후보와 호남 출신 한화갑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차지하면서 결국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다.

때문에 모든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호남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모든 조직을 총가동, 광주 경선 승리를 위해 뛰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광주 경선 승리만이 경선 구도를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다고 판단, 호남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 순회경선 후 같은 달 29일에 충청, 31일에 영남을 거쳐 수도권·강원·제주 대의원 순회투표까지 끝나는 4월3일에 누적 기준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면 경선

■ 경선 일정	
3월 25~26일	호남권
3월 27~28일	충청권
3월 29~30일	영남권
3월 31~4월 1일	수도권·강원·제주

은 끝난다.

그러나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4월 4일부터 나흘간 1, 2위 후보를 놓고 ARS, 인터넷, 투표소 투표를 치르고 8일에 전국대의원 현

장 투표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린다. 번수는 있다. 예비후보에 등록된 후보가 4명밖에 되지 않아 7명 이상일 때 치르기 한 예비경선이 없는 만큼 미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19~20일로 예정된 본경선 후보 등록을 앞당길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나머지 경선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물론 후보자 간 룰 협상에 따라 세부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차 선거인단 모집 두고 다시 갈등

지도부 7일 의결에 安·李 “최대한 늘려야”...文 “당에 위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0일로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시간표가 운곽을 잡아 가는 가운데 2차 선거인단 모집 기간을 두고 후보자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는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기간을 탄핵심판 후 7일로 권고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이 경우 2차 선거인단 모집은 11~17일에 이뤄진다. 하지만, 후보자 간 룰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세부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 측 김경수 대변인은 “경선결과 관련 이야기를 일체 하

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과 다른 후보들의 조율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반면,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선거인단 모집기간 축소는 국민의 참여 열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분위기 속에서 당내 경선이 진행되어야 본선에서 확실한 정권교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 김병욱 대변인도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선관위에 더 위임돼 있는데, 굳이 최고위가 나서서 기간을 특정해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찾은 안희정·송영길

안희정 “탄핵 인용으로 새 출발해야”

시의회서 기자회견...“포용·이해가 소신” 선의발언 사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이미 결정된 대로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결론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의 최종 선고를 긴장된 마음으로, 걱정과 위기감으로 현재의 최종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전날 광주 송정시장을 찾아 시민을 상대로 언급했던 ‘대연정과 선의발언 오해’에 대해 재차 “명백한 오해”고 해명하면서 “오해를 사고 마음 아프게 했다”며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누구라 할지라도 포용하고 안고 이해하는 취지가 ‘선의’인데 그것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덮거나 우클릭으로 오해를 샀다”면서 “광주시민께 적절히 설명하지 못해 오해를 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느꼈던 시민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 발언”과 “대연정”은



민주당의 대원칙에 대한 저의 소신”이라면서 “지하지 않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설득하고 지지토록 노력하고 대화도 계속하고, 포용하는 것이 결국엔 선의”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주의는 공생의 철학이며 안보관과 평화관이 서로 다투더라도 우리가 한가족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화의 폭을 넓히고 국가란 이름으로 단결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직폐청산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분노에 머물러 있지만 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회에서 협치를 통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최원길기자 cki@

송영길 “朴 국정농단 총체적 헌법 위반”

남구청서 특강...“검찰 개혁 위해 검사장 직선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이 광주를 찾아 ‘2017년, 다시 읽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송 의원은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과 비리가 불려온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광주 남구청이 주최한 ‘문화교육지구 브랜드 제고를 위한 특강’에서 고흥 출신의 4선의원으로 인천시장을 지낸 송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국 상황을 헌법의 각 조문에 적용해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짚어 청중의 큰 공감을 얻었다.

송 의원은 강연 모두부터 헌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 2항을 들어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위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즉, 최태민·최순실·정운호로 이어진 국정농단과, 김기춘-조윤선-우병우-안종범 등 특정인에 의해 저질러진 폐단은 총체적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같은 비리가 자행된 데는 선출되지 않고 견제받지 않으며,



임기가 없는 검찰 권력의 부당한 행사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사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른바 ‘문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9조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제22조 1항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큰 논란으로 떠오른 ‘사드’ 처리 과정 역시 헌법준수와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헌법 60조에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임명사형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

김종인 ‘광폭행보’

유승민·남경필·손학규 연쇄 회동 민주 탈당 여진...합류 의원 관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9일에도 여야를 넘나들면서 인사들을 만나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탈당 여진이 계속됐다.

김 전 대표가 행보 과정에서 협치 없이는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개헌과 연정론이 정계개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아침,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깝게 지내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찬 회동을 했다. 진영·변재일·김성수·박용진·최명길·최운열 의원 등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탄핵 결정 이후의 정국의 변화와 대응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점심을 함께했다. 이어 10일에는 같은 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과 오찬을 함께 하며 탄핵 선고 이후 정국구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앞서 탈당을 공식화한 지난 7일에는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유승민 “김대표님 앉으시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 조찬 회동을 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이른바 ‘반패권시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친문(친문재인)과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한 세력들이 규합해 정권을 창출하고, 국가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특히 김 전 대표는 탄핵 선고일인 10일 이후 대선구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세 규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김 전 대표의 이런 광폭행보로 민주당은 술렁거리고 있다. 무엇보다 김 전 대표를 따라 탈당해 새로운 세력에 합류할 의원

들이 얼마나 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최명길 의원은 이날 “최근 언론에서 탈당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3명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전부 아닐 것”이라면서 “예상보다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최저가 776,000,000
건물 419평 감평가 1,108,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대지 22평 최저가 902,000,000
전용면적 35평 감평가 1,610,000,000

동구 수기동 근린시설

대지 51평 최저가 210,000,000
건물 60평 감평가 300,000,000

남구 주월동 근린시설

대지 50평 최저가 99,000,000
건물 28평 감평가 141,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최저가 3,151,000,000
건물 577평 감평가 4,501,000,000

나주 보산동 근린시설

대지 437평 최저가 212,000,000
건물 91평 감평가 302,000,000

운림동 기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정 아주풍운)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재일오피스텔 29형

감정가격 9,000만원
금 매매 6,2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경.공매컨설팅
초보자 00명 모집 062)232-9994

010-3070-2147 유 여사